

민주, 내일 본회의서 양곡관리법·간호·의료법 처리 추진

양곡관리법 재의...대정부 규탄 준비 간호법, 의료법도...“합의 처리 법안” 典엔 “시간 끌기, 이중 태도” 비판해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 관련 대정부 규탄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

같은 날 다뤄질 전망이다 간호법, 의료법 등 쟁점 법안에 관해선 ‘여야 합의 처리 사안’임을 강조하면서 여당 측 수정 기류에 대해 반발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11일 기자들과 만나 “13일 본회의에서 양곡법 재의결을 강력하게 추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는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본회의에 상정되면 찬성 토론과 함께 대정부 질문도 안건에 대해 할 수 있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을 대변해 양곡법이 필요하며, 거부권은 잘못했다는 입장이 많은 여론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는 만큼 민의를 대변해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고 따져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대정부질문 참여 의원 구성에 대해선 “선정 과정 중”이라며 “가장 효과적으로 질의하고 국민 입장을 대변해 질문할 수 있는 의원 선정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13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의료법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쟁점 법안에 대한 의결도 강하게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법, 의료법에 대해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이 아닌 여야가 그동안 삼위위에서 합의해 처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7개 법안 중 하나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해 지난 본회의 처리했고, 나머지 법 중 의료법 포함 5건은 만장일치였다”고 했다. 또 “간호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토론하다가 퇴장하고 남은 의원들이 좀 있었다”며 “남은 의원들이 표결해 만장일치로 처리한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직회부를 결정할 때에도 여당은 들어 왔다”며 “어떻게 할까 해 표결 처리하는 것으로 해 직회부를 한 것이며, 법사위 절차를 너무 지연시켜 이렇게 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간호법에 대해 “여야 대통령 후보가 약속했던 것인데, 법 성격을 축소한다거나 하는 것은 저희가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며 “그간 합의 정신을 정면 부정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법에 대해선 “그동안 왜곡, 전담된 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분들이 많다”며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에 게 같은 적용을 하지는 개정안이 마련돼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회의장도 왜 정부여당이 중재하지 않는냐고 여러 번 비공개 자리에서 얘기했는데, 손 놓고 있다가 직회부 앞두고 나서는 모양새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의대 정원 확대는 반대하면서 성범죄, 중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한 자격 제한을 반대하는 게 국민 동의를 얻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이미 충분히 절차를 거쳤고, 내용도 우려를 반영해 수용해 왔기 때문에 이제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통해 복지위에서 올린 이 법안들을 처리할 일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간호법 본회의의 상정을 앞두고 느닷없이 대안을 내놓겠다고 한다”며 “시간 끌기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간호법 제정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난 대선 공약 공약”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이 부탁을 안 한 건지 국민의힘은 요지부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간 논의 경과를 소개하고 “간호단체를 만나면 간호법 지지, 의사단체를 만나면 간호법을 지지하겠다는 국민의힘 이중 태도가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의료계를 향해 “간호법으로 인해 타지역 업무가 침범 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간호법에 대한 오해를 거두고 갈등을 멈춰주길 호소 드린다”고 말했다.

최이슬기자

이석주 여수시의원, 인구감소·비수도권 교육특구 지정 입법 진행



이석주 여수시의원은 10일 제22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교육 분야 정주여건 개선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2020년 전남 인구 통계자료와 여수산단 직원 주거 현황자료를 통해 청년 및 산단 직원들의 인구 유출이 많았다고 분석하며

“교육특구 지정받고 기업 지역교육 투자 유도해 인구유입하자”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인구감소 및 비수도권 지역 교육 자유특구 지정·운영 관련 입법이 진행 중임을 설명하고 “여수시는 정부에 교육 자유특구를 신청해 지역의 열악한 교육 인프라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교육특구에서는 특화 교육과정 운영, 학생 선발이 가능해 수도권의 인재 풀림 현상을 막고 인구 유입, 지역 교육 수준 및 환경 향상,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취업 기회 확대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이 의원은 “일부 기업에서는 교육에 대

한 투자를 축소하고, 기업의 이윤을 교육에 환원하지 않으려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하며 여수시가 기업이 지역교육에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방안으로 “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며 교육과 관련된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기업이 교육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시 정부는 인재육성 산업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을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린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여수=김현근기자

광주 북구의회 이숙희 의원, 거리공연 활성화 위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해야

광주 북구의회 이숙희 의원(두암1·2·3, 풍향, 문화, 석곡동)과 신정훈 의원(우산, 문흥1·2, 오치1·2동)이 제285회 임시회에 공동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두 의원은 공공장소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문화 예술 공연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예술 진흥 및 대중화에 기여하고 지역 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뜻을 모아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하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 ▲협력체계의 구축 ▲안전 및 질서유지 ▲규정 및 거리공연자

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이 다. 특히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조문을 만드는 단계부터 관계자들의 의견을 취합했으며, 지난달 15일에는 거리공연 관계자 및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조례안에 반영하였다.

이숙희 의원은 “조례제정으로 정책적으로 거리공연 활성화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거리공연이 북구를 대표하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슬비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